

# 고용률 63.9% 전국 2위, 건설업·농어업 선전 기여

## 전남 2020년 개인소득 10위권 진입

전남도민들의 1인당 개인 소득이 2017년 끝인 17위에서 2018년 15위, 2019년 13위에 이어 2020년 10위에 진입했다. 상승률만 보면 조만간 부산, 인천 등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1인당 개인 소득, 즉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증가한 것은 우선 전남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총소득이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과거 전남 외 지역으로 유출됐던 생산·소득의 일부가 고용지표의 개선, 주력산업의 선전, 공공자금 투입 규모의 급증 등에 의해 도민 주머니로 들어오면서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다.

◇역외유출 2017년에 비해 2020년 2조원 감소=

## 실업률 개선·농민수당 등 공적자금 임금 상승하며 개인소득 증가

전남의 산업은 서비스업(47.2%), 광업·제조업(31.2%), 건설업(10.1%), 농림어업(7.9%)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산업에서 생산한 부가가치의 합이 지역내 총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7년과 2020년을 비교할 때 공공 부문이 6조7400억원에서 8조2100억원, 건설업이 4조3000억원에서 6조9400억원, 농림어업이 5조600억원에서 5조4500억원으로 각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제조업 등이 다소 저조했지만, 지역내 총생산이 2017년 73조원에서 2020년 78조로 5조원 늘었다.

이에 따라 지역내 총소득 역시 2017년 62조원에서 2020년 69조원으로 7조원이 증가했다.

여기에 전남의 1인당 개인 소득이 급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2017년에는 73조를 생산, 11조원이 역외로 유출돼 62조원이 소득으로 잡혔지만, 2020년에는 78조를 생산, 9조원이 역외로 나가는데 그쳐 69조원이 지역 내에 안착한 것이다. 지역 밖으로 나갔던 부가가치가 높은 고용률, 농민수당·정년전세자금 등 공적 지원, 임금 상승 등에 의해 지역 내로 돌아와 도민들의 소득 증가로 연계된 것이다.

◇고용률·실업률 개선, 공적자금에 임금 상승하며 개인 소득 증가=총개인소득은 보수, 사회수혜금, 기타 경상이전, 기타 고정 지출의 합이다. 전남도민의 총개인소득은 2017년 30조5900억원에서

2020년 35조4600억원으로, 약 5조원이 증가했다. 보수가 2조6000억원, 사회수혜금이 1조4100억원, 기타 경상이전이 2조3600억원 증가하고 기타 고정 지출이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총개인소득을 추계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개인 소득이 되는데, 지난 2017년 1704만3000원이었으나, 2020년 2010만3000원으로 306만원이 상승한 것이다.

보수의 증가는 고용지표의 개선으로 가능했다. 2017년 98만1000명이었던 취업자는 2020년 98만8000명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농림어업 숙련종사자가 1만6000명, 화학·기계 제조 등 직원이 4000명이 늘었다. 고용률은 62.1%(전국 5위)에서 63.9%(전국 2위)로, 실업률은 3.2%(전국 10위)에서 2.4%(전국 1위)로 각각 개선됐다.

농업수당 등에 힘입어 농가소득 역시 2017년 3966만원에서 2020년 4367만8000원으로 올라도민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전남도가 인건비, 운영관리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사업비로 투자하는 공적자금도 2017년 4조3336억원에서 2020년 5조485억원으로 7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도 이유가 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1인당 개인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민들이 다른 시도민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운택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소득 증대와 함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수도권 등으로 나갔던 지역 청년들이 돌아오고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도시민들이 전남으로 귀농·귀촌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수습지원금 전달

이용섭 광주시장(왼쪽)이 25일 오후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 마련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송하진 전북지사로부터 사고 수습 지원금을 전달 받고 있다.

## 광주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 체류형 관광·지역 여행업체 지원 강화도

광주시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침체에 빠진 지역 관광업계를 돕기 위해 2022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체류형 관광상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기존 당일 관광위주로 지원됐던 국내외 유치지원 시스템을 개선해 숙박비 지원액을 1박의 경우 1인당 3만원(4인 이상 14인 이하 차량) 또는 60만원(15인 이상 차량)으로 당일 여행 대비 지원액을 기존 2배에서 3배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여행업체에 대한 지원계획도 이어진다.

숙박비 지원액 기준으로 관내 여행업체의 경우 1인당 5만원(4인 이상 14인 이하 차량) 또는 80만원(15인 이상 차량)으로 관외 여행업체 대비 각각

2만원,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유치보상금 정책 실행업체 중 지역업체가 28%를 차지하고, 지원금액도 40%에 육박하는 등 지역여행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에 따라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위해 지역업체 우대지원 정책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및 무안공향 이용 관광객 유치보상금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본 후 해당 지원금 일부를 내국인 관광객 유치보상금 전환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보상금은 이달부터 올해 편성된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되며,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한 여행사다.

정확한 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등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정부 AI정책 선제 대응해 광주·전남 미래 경쟁력 갖춰야”

###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전남 AI 활성화 10대 추진과제 제안

광주·전남이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정부 각 부처에서 확대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정책에 맞는 특화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부처 업무 혁신도 가속화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도 정부 정책 맞춤형 AI 특화사업 발굴 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25일 광주전남 정책Brief '2022년 부처별 인공지능 분야 동향과 시사점'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8개 부처의 인공지능 분야 사업 계획을 분석하고 광주·전남 지역 여건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 마련을 제안했다. 올해 부처별 주요 AI사업 추진계획은 ▲디지털

·AI 인력 양성(고용노동부) ▲IoT·AI기반 스마트 돌봄 시스템 확대(여성가족부) ▲AI가전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산업통상자원부) ▲AI 어선안전건조 플랫폼 개발(해양수산부) 등이다.

연구원은 이 같은 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사업은 광주 인공지능 국가거점화, AI반도체, AI가전, 정밀농업, 스마트항만, 스마트양식 등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추진중인 AI 사업들과도 밀접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광주·전남 AI 활성화를 위한 10대 추진과제로 ▲AI 헬스케어 로봇 개발 거점 조성 ▲광산업과 연계한 AI 반도체 산업 기반 구축 ▲광양향 스마트 복합물류 AI항만 실현 ▲메타버스·블록체인 연계 AI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AI 기반

광주전남 일상 안전 모니터링 지도 구축 ▲국가 AI알고리즘개발센터 설립 ▲AI팩토리 확대 ▲주민 디지털 기반 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AI 마일리지 제도 도입 ▲인공지능 선도사업 및 특화융합 과제 발굴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 공동 노력 등을 제시했다.

광주전남연구원 환경로봇 인공지능지원센터장은 "인공지능과 에너지·헬스케어·농식품·해양수산 등 지역 강점과 인공지능을 연계한 초광역 협력사업 구상, 메타버스 등 신기술과의 융합을 바탕으로 대 전환 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올해 새 정부 및 민선 8기 출범을 맞아 지역 관련 인공지능 산업의 국정과제화 및 예산 확보 등에 집중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올해부터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 1인 30만7500원·부부 49만 2000원

전남도가 기초연금 수령 어르신 35만8000명에 게 지난해보다 오른 1월분 1462억원을 일제히 지급했다. 설을 맞아 제수용품 구입 및 손자손녀 세뱃돈 등을 위해 긴요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1인가구의 경우 지난해보다 7500원 인상한 30만7500원, 부부가구는 12만원 오른 49만 2000원이다. 선정기준액도 지난해보다 6.5% 확대해 1인가구는 169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에서 28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증액한 총 1조2285억원을 35만 8000명의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한다.

2021년 12월 기준 전남지역 기초연금 수령 노인은 전체 노인인구의 80.4%로, 전국 평균 67.2%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는 전남도가 꾸준히 수혜자를 발굴하고 지원한 결과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2021년 기초연금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우면 온라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소득이 단절된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베이비부머 1세대(1955~1956년생)가 기초연금 지급 나이로 새로 편입됨에 따라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도록 적극 홍보해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방치된 묘지 70%(추정)

이제는 “수목장”입니다.

가족(30평 이하) 수목장

나를 위해, 후대를 위해, 환경을 위해 수목장으로~

- 1 매장,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저렴
- 2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으로 사용
- 3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

수목장 장점

개인 수목장 조성 과정

가족(30평 이하) 수목장

개인묘지 수목장 전환

가족묘, 문중묘 → 수목장 전환

저출산 고령화의 그늘 후손들에게 묘지 관리를 기대하거나 의지할 수 있을까요?

문의: 062-464-9190